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5·18 왜곡 처벌법’ 포함 공감대

한국당 빠진 여야, 단일안 막판 조율…공수처 설치 논의 속도
‘나경원 막말 후폭풍’ 국회 강대 강…민주, 윤리위 제소 당론

여야는 13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한국당은 이를 ‘좌파 전체주의’라고 맞받으면서 민주당 지도부를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어서 가까스로 열린 3월 임시국회가 요동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5·18 왜곡 처벌법도 포함하기로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

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이 대표발의한 정계안에는 민주당 의원 128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정계안은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는 망언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동시에 촛불혁명을 통해 선출된 대한민국 대통령을 모독하고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야당을 통해 전달되는 ‘국민의 아우성’을 귀담아듣지 않고 독선과 오만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나 원내대표의 전

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방해한 책임을 물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당은 조만간 윤리위에 정계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민주당은 조직적으로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방해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여러가지 언사 또는 행동이 명백히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따라서 먼저 조직적 방해를 지휘한 이해찬 당대표, 홍영표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의총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거대 양당’이라 지칭하며 싸잡아 비판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손학규 대표 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정치적 급도를 넘었다”면서도 “민주당의 반응도 도저히 지켜볼 수 없을 정도

로 한심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패스트트랙 공조도 여야 대치 국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4당 공조를 통해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의 입법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등을 거론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화동, 선거제 개혁 단일안에 대해 막판 조율을 나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비공개 회동을 통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 처리에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5·18 왜곡 처벌법도 패스트 트랙에 올리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미세먼지는 재난” 문제 해결에 국비 투입

을 첫 법안처리 본회의…학교, 측정기·청정기 설치 의무화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에 포함되고, 앞으로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처음으로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 등을 처리했다.

국회는 먼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재난으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또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LPG 차량은 경유·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다.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본회의를 통과한 향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향만지역의 대기

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국회는 아울러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친 4건의 미세먼지 대책 법안도 의결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2021년 3월 31일까지 끝내고,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 공기 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정·협동어린이집, 실내어린이 놀이시설까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천일염 소비·산업 활성화”
서삼석 소금산업진흥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3일 ‘소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산 천일염 소비촉진과 소금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을 소금 구매 총액의 20% 이상 50% 이하 범위에서 구매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은 우수천일염인증품을 먼저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김장 문화의 변화, 저염식 선호 등에 따른 식생활의 변화로 천일염 소비는 감소하고 가격은 폭락해 천일염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외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외면한 채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영 “문대통령 -야당 월 1회 정례회동 하자”

바른미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3일 “청와대가 야당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으로 대통령이 야당과 한 달에 한번 이상 정례적으로 회동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같이 제안한 뒤 “정부와 여당은 20대 국회 남은 1년간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지 목록을 만들어 야당에 제출해 협조를 요청하고, 야당은 논의에 성실히 임하자”며 ‘소통 강화’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 도입’을 강조하면서 “바른미래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가장 잘 반영한 단일안을 만들어 빠른 시간 내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례대표제 폐지, 지역구 270석으로 확대’를 골자로 한 자유한국당

의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위헌적 발상이며, 선거에서 사표(死票)를 더 증가시키는 반개혁적·반민주적 억지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절차 돌입이 여야 간 선거법 합의 처리를 위한 신속한 협상의 촉매제가 되길 희망한다”며 한국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이 제기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은 구공공력과 같이 배일에 가려진 청와대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정치개혁의 첫 번째 출발은 ‘만기청(청와대)람’이라 불리며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국정 운영에 대해 “이전 정부의 적폐라 지적하고 비판했던 일들이 현 정부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며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 이후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 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해 상황을 판단하는 ‘확증편향’의 오류를 경계해야 한다”며 “보수세력 역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 노력에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책에 대해서 그는 “부의부 민익민을 가속화시킨 소득주도성장은 실패로 막을 내렸다”며 “문재인정부 3년 차에 민생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1년 뒤 경제상황을 본 뒤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결정하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관 확대를 3월 국회에서 매듭지을 것을 제안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당정, 희귀병 치료 의약품 신속 허가제 도입

당정이 희귀·난치병 환자 치료를 위한 첨단 재생의료와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 임상연구 허용 기준을 완화하고 의약품 허가 신속처리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1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소속 의원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청와대 김연명 사회 수석 등은 최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관련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재생의료 분야 관리체계 구축을 비롯해 임상연구 활성화, 첨단 바이오 의약품 품목허가 신속처리 지원을 골

자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다. 당정은 이 법안과 함께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과 지원 방안을 담은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지원법, 체외진단 의료기술의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등 복지위에 계류중인 3개 제정법안의 신속한 처리에 뜻을 모았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 허가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신속처리 제도에 대해서 약용시 안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최대한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할 방침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당 선거제 합의시 원포인트 권력구조 논의”

심상정 정개혁위 위원장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혁위) 심상정 위원장은 13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합의에 임한다면 (한국당이 주장하는) ‘원포인트 권력구조’ 논의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밝힌 뒤 “하지만 합의에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권력구조 개편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나경원 원내대표가 우선 선거제 개혁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러시아산
Siberian Chaga
시베리안
차가버섯

100% 동결건조 농축분말

Vitamin House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